 금융위원회	<b>보 도 자 료</b>				• 미래창조 금융 • 따뜻한 금융 • 튼튼한 금융
	<b>보도</b>	<b>1.18(수) 조간부터</b>	<b>배포</b>	<b>2017.1.17.(화)</b>	
<b>책 임 자</b>	금융위 자본시장과장 박 민 우(02-2100-2650)	<b>담 당 자</b>	김 성 준 서기관 (02-2100-2651)		
	금융위 자산운용과장 김 기 한(02-2100-2660)		이 동 옥 사무관 (02-2156-2661)		
	금융위 공정시장과장 이 석 란(02-2100-2680)		김 보 균 사무관 (02-2100-2681)		

## 제 목 : 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상세 브리핑 ⑥

-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30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.

□ 지난 2016년은 모험자본 공급, 위험의 적극적 인수 및 관리(Risk taking-management)와 같은 자본시장·금융투자업계 본연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한 해였음

- ① 「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」을 통해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창업·중소·벤처기업이 집단지성의 평가를 받아 십시일반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 ('16.1월 시행)
- ② 사모펀드에는 일반화 되어 있으나 공모펀드에는 사실상 금지되던 「성과보수 제도」를 공모펀드에 전향적으로 도입하여 운용업계가 공모펀드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주고자 노력하는 경쟁의 기본틀을 마련 ('16.4월 발표)
- ③ 대형 증권사들이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모험자본 공급 등 기업금융을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투자은행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단기금융업무, IMA 허용 등 「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」을 제시 ('16.8월 발표)

- ④ 성장잠재력 있는 이익미실현 기업이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여 도약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(테슬라요진), 상장주선·공모가 산정 과정에서 증권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\*하는 「상장·공모제도 개편방안」 마련('16.10월 발표)  
\* 상장주관사가 규제 받지 않고 공모가를 산정할 수 있는 선택지(option)를 제공
- ⑤ 예금, 펀드, 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하면서 손익 통산 등 금융소득 과세의 새로운 기준하에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는 「ISA를 도입」하여 새로운 국민재산증식 수단 제공 ('16.3월 출시)
- ⑥ 독립투자자문업자 제도를 도입하고, 사람에 한정된 전문운용인력 인정틀을 넘어서는 「로보어드바이저」 제도 도입을 통해 혁신적인 자문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 ('16.3월 발표)
- ⑦ '11년 규제 이후 투기 재발 우려로 선뜻 제도개선에 나서지 못했던 「파생상품시장」에 대해 거래승수·투자자 진입규제 합리화 등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 ('16.11월 발표)
- ⑧ 자본시장 핵심 인프라인 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 회복을 위해 「거래소 지주회사 제도 도입」을 추진하는 등 거래소 구조개편을 지속 도모
- ⑨ 「회사채시장 인프라 개선 및 기업 자금조달 지원 방안 마련」('16.7월 발표) 「중기특화 증권사 지정」('16.4.15, 6개사) 등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의 자금조달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정비를 지속 추진
- ⑩ 신용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「신용평가지장 선진화 방안」('16.9월 발표)을 추진하고, 「공매도제도 및 공시제도」의 미비점을 보완('16.11월 발표)하는 등 시장 건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

□ 자본시장 개혁과제들이 하나 둘씩 현장에 착근 중임

○ 클라우드 펀딩, 코넥스·코스닥시장 등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 자금 공급이 확대

- 지난해 110개 기업이 클라우드 펀딩에 성공하여 174억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등 아이디어의 절반(성공률 약 46%)이 사업화 기회를 수혜

- 지난해에만 11개 코넥스 상장기업이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하는 등 코넥스시장은 중소기업 자금조달 창구이자 코스닥 진입을 준비하는 인큐베이팅 시장으로 자리매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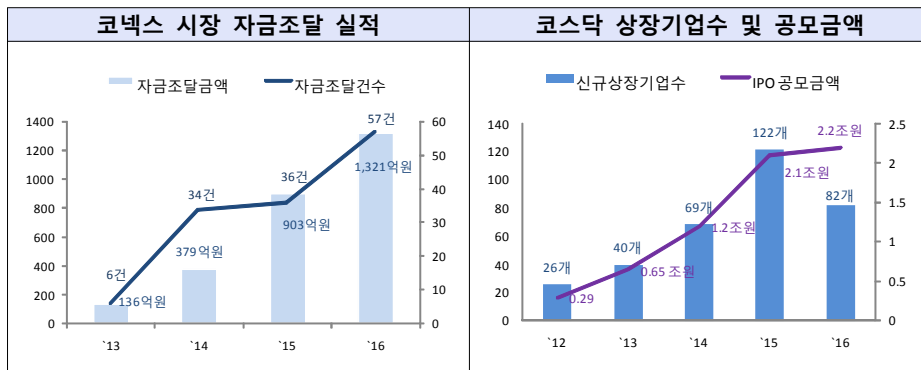
\* 코넥스 개설('13.7~)이후 코넥스시장 자체에서 3,000억원의 자금이 조달되었으며, 25개 기업이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하면서 2,500억원의 자금을 조달

\* 상장기업수 : ('13) 21 → ('16말)141 / 시가총액 : ('13)0.5조원 → ('16말)4.3조원

- 지난해 코스닥시장에 82개의 기업이 새롭게 상장하였고 코스닥시장 IPO, 유상증자를 통해 기업들이 3.4조원(IPO 2.2조, 유증 1.2조)의 자금을 조달

\* 신규상장수(개) : ('12) 26 ('13) 40 ('14) 69 ('15) 122 ('16) 82

IPO 공모금액(조원) : ('12) 0.29 ('13) 0.65 ('14) 1.2 ('15) 2.1 ('16) 2.2



○ 국민재산 증식을 위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개발·공급

- ISA는 지난해 말까지 240만명이 계좌를 개설하고, 총 잔고가 3.4조원에 달하는 명실상부한 국민통장으로 성장

- 자산운용업은 펀드 종류, 투자대상 자산이 다변화되고 펀드 순자산이 462.4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

\* ('15년말) 413.6조원 → ('16년말) 462.4조원으로 지난해 48.8조원 증가

- 로보어드바이저(RA)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알고리즘의 안정성과 운용능력 등을 심사하는 테스트베드를 개시(1차 '16.10~'17.4)하였으며, 1차 테스트 베드에 33개 알고리즘이 참여하여 시장에서는 그 결과를 주목하고 있음

\* 33개 참여 알고리즘 중 직접 자문·일임서비스를 준비중인 16개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시스템안정성·보안성심사를 병행 실시

- 펀드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운영관리 역량 집증을 위해 소규모 펀드를 정리하여 '15.6월 36.3%(815개)에 달하던 소규모펀드 비율이 '16년말 7.2%(126개)수준으로 감소

□ 2017년에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방향 하에서 자본시장 개혁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임

① 지난해 발표한 5+1 자본시장 개혁과제를 포함하여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등 여타 핵심 개혁과제를 차질없이 추진

②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하여 시장 안정을 도모해나가고 금융투자업계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

③ 모험자본 공급, 자본시장·금융투자업 경쟁력 제고,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은 금년중에도 지속적으로 추진

□ 2017년에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신규로 추진해 나갈 계획

## ① 장외거래플랫폼 기능 강화

- 창업기업을 위한 회수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제도화된 장외 주식 거래시장(금융투자협회 운영)의 기능을 강화

- K-OTC를 통한 거래시 증권거래세 인하\*(0.5%→0.3%)와 함께, 증권 신고서 제출 면제범위\*\*를 확대하는 등 투자자 편의를 제고

\* '16년 세법개정방안('16.7.28)에서 발표(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)  
→ '17.4.1 거래부터 적용

\*\* (현행) 소액주주(1% 또는 3억원 미만 보유)가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만 면제  
(개선) 발행인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인 경우에는 10%미만 보유 주주가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도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

- K-OTC BB에 펀드지분 거래기능을 추가하고, 시장조성 기능을 도입\*하여 벤처투자 회수시장 활성화 도모

\* 펀드 지분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별도 펀드를 조성·운영

## ② 코넥스시장 제도개선 방안 마련

- 코넥스 기술특례상장제도('15.7.6 도입 이후 적용사례가 1건에 불과)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모색

- 테슬라 요건 도입 등 코스닥 상장요건이 변경된 점을 감안하여 수익성 위주의 코넥스→코스닥 이전상장 요건\*의 개선 필요성 검토

\* 최근 2사업연도 모두 당기순익 20억원 & ROE 10% 이상

## ③ 성장사다리펀드 신규 조성

- '13.8월 도입된 성장사다리펀드는 당초 조성목표인 6조원을 초과달성 (6.3조원)하며 중소·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을 공급

- 금년에도 既투자액의 회수자금(2,600억원)을 이용한 신규펀드 9,400억원을 추가 조성\*하여 자본공급을 확대 (총 6.3조원 → 총 7.2조원)

\* 신산업펀드(3,000억원), 기술금융펀드(3,000억원), 스타트업펀드(800억원), 재기지원펀드(2,000억원), 세컨더리펀드(600억원) 등

- 특히, 창업·벤처, 기술가치 기업 등 시장수요가 높은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나갈 계획

\* 투자금액 : ('14) 0.47조원 → ('15) 1.14조원 → ('16) 0.99조원 → ('17 목표) 1.3조원  
( '17년 투자액 중 창업·벤처 부문 1,800억원, 기술가치 부문 3,000억원 지원 예정)

## ④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중간평가 및 기능 강화방안 마련

- 중기특화 증권사(6개)의 1년간 활동실적('16.4.16~'17.4.15)을 평가하고 중기특화 증권사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검토

- 아울러, 관련 정책금융기관\* 등의 중기특화 증권사 지원실적을 점검하고, 지원 활성화 방안 등 모색

\* 산은·기은·신보·기보·한국증권금융·한국성장금융

## ⑤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제·감독방안 마련

-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자에 대한 신고 결격요건을 신설하고, 불법·불건전 영업시 금융당국이 직권으로 신고를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미신고 업자 제재를 형사벌로 전환하는 방안 등 검토

-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간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여 불법적 영업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고, 언론사와의 협력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자의 증권방송 출연 제한 등 감독 강화

## ⑥ 조치명령권 활용도 제고

- 지금까지 긴급한 규제가 필요한 경우 행정지도나 업계 자율규제를 활용하였으나, 이러한 수단은 업계의 자발적 협조에 기반한 것으로 엄격한 집행이 어렵고, 미이행시 제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
- 조치명령권 행사의 세부기준,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, 긴급한 공적규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치명령권을 적극 활용
  - 긴급한 규제 필요성이 있는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판매 및 영업 활동을 제한하는 등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적극 활용
  - \*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 판매제한 명령권이 입법화되기 이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는 긴급한 판매제한이 가능
  - 기존 행정지도, 자율규제 등은 존속필요성을 재검토하여 공적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조치명령으로 대체
  - \* ARS(전문투자자에 대해 사모발행만 허용)나 HSCEI 추종 ELS(상환액 범위안에서만 신규발행) 판매 제한 등 기존 자율규제·행정지도의 조치명령 전환 등
  -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와 연계하여 필요시 선제적 자본 확충 등의 예방 조치를 명령

## ⑦ 온라인 펀드판매 활성화

- 펀드 투자자의 접근성과 선택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펀드 판매의 제반절차를 종합적 개선
  - 서비스 수준에 따라 판매보수·수수료를 차별화\*하는 등 온라인 펀드 판매 및 설정방식을 개선
  - \* 오프라인·온라인상 펀드 판매시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른 경우 이에 상응하여 판매보수·수수료가 부과되도록 권고 등

## ⑧ 회계제도 개편방안 마련

- 회계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선임에서부터 감독·제재에 이르는 외부감사 전 과정을 포괄하는 종합대책 마련
  - \* 1월중 대책을 발표하고, '17년중 후속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

## ⑨ 스튜어드십코드 확산 유도

- 스튜어드십코드의 확산을 통해 기관투자자, 자산운용사 등의 적극적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유도
  - \* 금융업권별 설명회(1~2월), 스튜어드십코드 참여기관 간담회(2월) 개최 등

## ⑩ 거래소 구조개편 지속 추진

- 자본시장 핵심 인프라인 거래소의 지주회사 개편을 통해 자본시장 전반의 활력과 경쟁력을 제고 :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 경주

< 별첨 > 상세 브리핑자료 ⑤ : 2017년 자본시장분야 주요 정책과제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금융위원회	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<a href="http://www.fsc.go.kr">http://www.fsc.go.kr</a>	금융위원회 대변인 <a href="mailto:prfsc@korea.kr">prfsc@korea.kr</a>	 넓게 들었습니다 바르게 알려겠습니다
--	--	---	---	---

## [별첨] 2017년 자본시장 분야 주요 정책과제

### (중점추진분야-1) 모험자본 공급 확충

- ① 자본시장 핵심 인프라인 거래소의 지주회사 개편을 통해 자본시장 전반의 활력과 경쟁력을 제고 :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 경주
  - 한국거래소지주회사 출범 시점에 ATS와의 경쟁체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ATS 설립여건 개선\*도 병행 추진
  - \* ATS 거래량 한도 확대('17.6월 시행), ATS 매매대상상품에 ETF·ETN·채권 추가 (ATS 설립 진척 상황을 보아가며 금년중 추진)
- ② 초대형 투자은행이 단기금융, IMA를 통한 기업금융 등 신규 업무를 차질없이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('17.2분기 인가 추진)
  - \* 예상일정 : 시행령·금융투자업규정 등 제도개선 완료(4월) → 업계 설명회 개최(4월) → 업무승인·인가 신청(4~5월) → 인가심사 등(5~6월) → 업무개시(6월이후)
- ③ 새로운 상장·공모제도를 시장에 안착시켜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보다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건 조성
  - \* 테슬라 요건 '17.1월 시행 → 통상 상장신청은 전년말 재무제표가 나오는 3월 이후에 이루어지므로 실제 혜택기업은 하반기 이후 출현 예상
- ④ 클라우드 펀딩 1주년 성과를 평가(1.24)하고, 더 많은 창업기업이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광고규제 완화, Seeding 펀드 운영 등을 차질없이 추진

- ⑤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넥스 특례상장 요건 및 코스닥 이전상장 요건 합리화 등 제도개선 추진(4월 발표)
- ⑥ '17년 중 9,400억원 규모의 성장사다리펀드를 신규 조성하고, 창업·기술혁신기업 등에 대한 지원 강화
  - \* 상반기 5,800억원(5월), 하반기 3,600억원(4분기) 조성
- ⑦ 비상장주식 거래 편의 제고를 위해 K-OTC 증권신고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장외거래플랫폼 기능 강화(5월 시행)
- ⑧ 중기특화 증권사 중간평가(5월)를 실시하고, 중기특화 증권사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(6월)

### (중점추진분야-2) 기업 경영 투명성 확보

- ⑨ 회계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선임에서부터 감독·제재에 이르는 외부감사 전 과정을 포괄하는 종합대책 마련
  - \* 1월중 대책을 발표하고, '17년중 후속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
- ⑩ 자체신용도 도입('17~'18년 단계적시행), 제3자 의뢰 신용평가 허용('17.4월) 등 평가의 신뢰성과 신용평가사의 독립성 제고를 위한 조치들을 차질없이 시행
- ⑪ 스튜어드십코드의 확산을 통해 기관투자자, 자산운용사 등의 적극적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유도
  - \* 금융업권별 설명회(1~2월), 스튜어드십코드 참여기관 간담회(2월) 개최 등

⑫ 합병, 유상증자 등에 적용되는 자본시장법령상 가치평가 기준의 적정성·합리성을 전반적으로 검토 (규제 필요성, 규제가 필요하다면 가치산정 기준일·산정방식 등)

- \*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용역(2분기)을 통해 현행 기준의 개편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되, 개선방안 마련 여부는 용역결과를 보고 판단(하반기)

### (중점추진분야-3) 국민재산 증식 여건 조성

⑬ 독립투자자문업(‘17.3월 등록개시), 로보어드바이저<sup>\*</sup>(‘17.5월 대고객 서비스 출시)와 같은 새로운 금융자문서비스를 선보이는 등 국민재산 증식 기반 조성

- \* 33개 RA의 포트폴리오 운용능력을 심사중이며, 그 중 대고객서비스를 계획 중인 16개 RA에 대해서는 시스템심사도 진행 → (4월말) 1차 테스트베드 심의결과 발표 → (5월) 서비스 개시

- 추가적인 로보어드바이저 진입 수요에 대응하여 2차 테스트베드 신청 접수를 3월부터 개시

⑭ ISA 출시 1주년(‘17.3.14) 성과를 평가(4월)하고, 이를 기반으로 ISA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(하반기 방안발표)

⑮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국민들의 안정적 노후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연금법 제정 추진(5월 국회제출)

⑯ 성과보수 공모펀드 등 다양한 펀드상품이 활성화<sup>\*</sup> 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조성

- \* 3월중 제도개편을 마무리 → 성과보수 펀드(3월), 액티브 ETF(4월), 사모투자 재간접펀드(상반기), 창업·벤처 PEF(하반기) 등 다양한 펀드상품 출시 예상

⑰ 투자자보호를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·감독방안 마련

- \* 금융법령 위반자에 대한 진입규제 등 신고요건 신설, 폐업 후 편법적 영업 금지, 미신고 영업 제재강화 등 규제방안 발표(2월)

⑱ 투자자가 상품별 수익률·비용 등을 한눈에 파악하고 투자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비교공시 확대

- \* 펀드다모아 비교공시사이트 1월중 개설, 로보어드바이저 비교공시 5월 본격화

⑲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단위농협 등 서민금융기관을 통한 펀드판매를 허용하고, 온라인 펀드판매 활성화 추진

- \* 단위농협의 공모펀드 판매 3월 개시, 온라인 펀드판매 활성화 방안 3월 발표

⑳ 소규모 공모펀드 정리를 지속 추진하되, 그간의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일부 제도개선

- \* 소규모펀드 산정방식·예외범위 등 개선, 모범규준 기한 연장(‘17.2월부터 1년간 연장)

### (중점추진분야-4) 자본시장 효율성 제고

㉑ 파생상품·파생결합증권의 상품다양성을 제고<sup>1)</sup>하고, 파생상품시장 진입규제를 합리화<sup>2)</sup>하는 한편, 장외파생상품 규제 인프라 정비<sup>3)</sup>

- 1) 손실제한형 ETN(3월), ETF선물·미니달러선물(6월), 개별주식옵션 종목 확대(20→30개 이상, 6월), 초장기 국채선물·해외지수선물(하반기)
- 2) 옵션매수 기본예탁금 인하(3월), 헤지전용계좌 도입(6월)
- 3) CCP 청산대상을 NDF 등으로 확대(하반기)

㉒ 담보로 제공된 국채를 재담보 및 RP거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국채의 활용가치를 제고(3월)

- ②③ 상장주식(2월) · 장내파생상품(6월) · 상장채권(하반기)에 대한 외국인 통합  
계좌 제도 단계적 도입
- ②④ '19년부터 주식 · 사채 등의 전자등록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도입  
로드맵을 마련 · 발표(하반기)하고 시행령 등 법령 정비 추진

#### (중점추진분야-5) 투자자 보호 및 시장안정 기반 강화

- ②⑤ 미국 금리인상, 중국 · 유럽 리스크 등 시장 불안 요인들을 상시 점검  
하고 필요시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
- ②⑥ 기업 자금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회사채 시장 활성화 등 자본시장을  
통한 기업 자금공급 여건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
- \* 담보부사채 담보범위 확대를 위한 담보부사채신탁법 개정안 국회 제출(상반기)
- ②⑦ 예상되는 모든 변수에 대해 보수적인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 
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는 경우 자본확충 등 예방조치 시행
- \* 증권사 우발채무 관리방안 시행(3월) : 대손준비금 적립 강화, 경영실태 평가시  
우발채무 평가 강화, 금융투자회사 자체 스트레스테스트 제도화 등
- ②⑧ 투자자 보호 및 시장 건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긴급조치를 신속하고  
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명령권 제도 정비
- \* 명령권 발동절차 · 기준 등 제도 정비 방안, 향후 활용계획 등 발표(3월)
- ②⑨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투자자 숙려제도 도입, 판매과정  
녹취 의무 등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
- \* ELS 등 파생결합증권을 70세이상 고령자 · 부적합투자자에게 판매시 투자자 숙려제도  
(4월) 및 판매과정 녹취의무(6월) 우선 시행 → 향후 다른 고위험 투자상품으로 확대 검토
- ③⑩ 공매도 거래자 유상증자 참여 제한(1분기 법안제출), 공매도 과열종목  
지정제도 도입 · 공매도 규제 위반자 제재 강화(3월) 등을 차질 없이 추진

시기	주요 발표 · 시행일정 (예상)
1월	<p>① 코스닥 상장을 위한 “테슬라 요건” 시행 (1.1일 시행)</p> <p>* 이익이 없는 기업도 성장잠재력이 있으면 코스닥시장 상장 가능 (통상 상장신청은 전년도 재무보고서 확정(3월) 이후 이루어지므로 실제 상장 기업은 하반기 이후 출현할 전망)</p> <p>② ELS 조달 자금과 고유재산간 구분관리 의무화 (1.1일 시행)</p> <p>* 금감원의 '17.1분기 증권사 영업실적 발표시 대략적인 운용현황 포함예정(5월)</p> <p>③ 민간 금융회사(약 105개사) 자체신용도 공개 개시 (1.1일 시행)</p> <p>* 1.1 이후 실시되는 모든 정기·수시·본평가시 자체신용도를 함께 기재</p> <p>④ 자율공시 중 기술·특허 관련 중요정보 의무공시 전환 (1.1일 시행)</p> <p>* 기술이전 · 도입 · 제휴계약, 특허권 취득 및 양수 · 양도 등</p> <p>⑤ 펀드다모아 비교공시 사이트 오픈 (1.16일 주간 오픈예정)</p> <p>⑥ 클라우드펀딩 1주년 기념행사 (1.24일)</p> <p>⑦ 감사인 선임제도 개선, 비감사용역 규제범위 확대, 감리주기 단축 등 회계제도 개편방안 발표</p> <p>* 외감법 전부개정안 국회 제출('17.1월중)</p>
2월	<p>① 외국인투자자의 상장주식 투자에 대한 통합계좌 제도 시행</p> <p>* 일괄 주문 및 일괄 결제를 허용하고 투자자별 거래내역은 사후 보고로 전환</p> <p>② 유사투자자문업 제도개선 방안 발표</p> <p>* 금융법령 위반자에 대한 진입규제 등 신고요건 신설, 폐업 후 편법적 영업 금지, 미신고 영업 제재강화 등</p> <p>③ 소규모 펀드 정리 관련 행정지도 연장('17.2월→'18.2월)</p> <p>* 행정지도 연장시 소규모펀드 산정방식, 예외범위 등 개선 추진</p> <p>④ 스튜어드십코드 확산 지원</p> <p>* 금융업권별 설명회, 스튜어드십코드 참여기관 간담회 개최</p> <p>*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문제에 대해서는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(No Action Letter) 등 적극 제공</p>



시기	주요 발표 · 시행일정 (예상)
3월	<p>① <u>조치명령권 제도정비 방안 발표</u> * 명령권 발동절차 · 기준 등 제도정비 방안, 향후 활용계획 등</p> <p>② <u>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</u>, 공매도 규제 위반자에 대한 <u>매도증권사전납부 의무화</u> 시행</p> <p>③ 국채 등을 활용한 <u>담보목적 대차거래</u> 시행</p> <p>④ 파생상품시장 <u>개인투자자 진입요건 합리화</u> 시행 * 옵션매수 기본예탁금 인하(5천만원→3천만원), 상품별 교육시간 차등화</p> <p>⑤ 증권사 <u>우발채무 관리강화</u> 방안 시행 * 우발채무에 대한 대손준비금 적립 강화, 경영실태평가시 우발채무 점검 강화 등</p> <p>⑥ 손실제한형 ETN 한국거래소 상장</p> <p>⑦ <u>온라인 펀드판매 활성화</u> 방안 발표 * 온라인 펀드의 저변 확대를 통해 펀드 투자자의 선택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반절차를 개선</p> <p>⑧ 독립투자자문업자(IFA) 자문서비스 제공 개시</p> <p>⑨ 서민금융기관 공모펀드 판매 개시 (단위농협부터 순차적으로)</p> <p>⑩ 성과보수 공모펀드 출시</p>
4월	<p>① <u>코넥스시장 제도개선 방안 발표</u> * 코넥스시장 특례상장 요건 · 코넥스기업 코스닥 이전상장 요건 합리화 등</p> <p>② 초대형 투자은행 관련 제도개선 마무리 및 업무승인 · 인가 신청 관련 설명회 추진</p> <p>③ 고령자 · 부적합투자자 대상 <u>파생결합증권 판매시 투자자 숙려제도</u>* 시행 * 청약 후 일정기간 이내 철회 허용('17.1.2 금감원 행정지도 → 4.1일 시행)</p> <p>④ ISA 출시 1주년('17.3.14) 성과평가</p> <p>⑤ 제3자 의뢰 신용평가 제도 시행 * 발행사가 아닌 투자자 · 구독자 등의 의뢰에 따른 신용평가 허용 ('17.1분기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→ 4월 시행 추진)</p> <p>⑥ 액티브 ETF 상품 한국거래소 상장</p> <p>⑦ 신속한 주가조작 조사를 위해 <u>모바일 포렌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“모바일 포렌식팀” 운영</u></p>

시기	주요 발표 · 시행일정 (예상)
5월	<p>① <u>중기특화 증권사 중간평가 실시</u> * 1년간 활동실적('16.4.16~'17.4.15)을 취합 · 평가하여 실적이 미진한 회사는 지정을 취소하는 한편, 제도개선 사항 등 발굴 · 검토</p> <p>② <u>로보어드바이저(RA) 대고객 자문서비스 제공 개시</u> * 4월 1차 RA 테스트베드 결과 심의 → 5월부터 서비스 제공 * 3월부터 2차 RA 테스트베드 참가신청을 받아 2차 테스트베드 병행추진</p> <p>③ <u>개인연금법 제정안 국회 제출</u></p> <p>④ '17년도 상반기 <u>성장사다리펀드 조성</u> (5,800억원) * 스타트업(300억원), 신산업육성(3,000억원), 기술금융(500억원), 재가지원(2,000억원)</p> <p>⑤ <u>K-OTC 장외거래플랫폼 기능 강화방안</u> 시행 *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완화 / K-OTC BB에 펀드지분 거래기능 추가 등</p>
6월	<p>① 초대형 투자은행 업무승인 및 인가 * 단기금융업무(발행어음), 종합투자계좌, 외국환 환전 업무 등</p> <p>② <u>중기특화 증권사 기능 강화방안 마련</u></p> <p>③ 외국인 투자자의 <u>장내파생상품 통합계좌</u>(일괄주문 · 결제) 제도 시행</p> <p>④ 장내파생상품 개인투자자 <u>헤지전용계좌</u>* 시행 *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현물자산 범위 내에서 헤지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기본 예탁금 적용 배제 (4월 거래소 규정개정 → 전산개편 → 6월 시행)</p> <p>⑤ 고령자 · 부적합투자자 대상 <u>파생결합증권 판매과정 녹취의무</u> 시행 * 4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→ 실무준비 → 6월 시행</p> <p>⑥ <u>담보부사채신탁법</u> 개정안 국회 제출 (필요시 의원입법 추진) * 담보범위 확대(현재 사실상 부동산에 국한 → 지적재산권, 매출채권 등으로 확대)</p> <p>⑦ <u>신평사 책임성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</u> 국회 제출 * 신평사의 고의 · 중과실로 신용등급이 영향을 받아 투자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신평사의 손해배상책임 명시</p> <p>⑧ <u>사모투자 재간접펀드 상품 출시</u> 추진</p>



시기	주요 발표 · 시행일정 (예상)
3~4분기	<p><b>① ISA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표</b></p> <p>* 출시 1주년 이후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 마련</p> <p><b>② 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제도 도입 로드맵 발표</b></p> <p>* 2019년까지 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시기별 이행계획 및 관련 법률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등</p> <p><b>③ 기업가치 산정기준 개편방안 검토</b></p> <p>* 합병, 유상증자 등의 과정에서 활용되는 현행 기업가치 산정기준의 적절성, 개편 필요성 등을 검토(2분기까지 전문 연구기관 연구용역)</p> <p><b>④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</b></p> <p>* 상반기중 스트레스테스트를 마무리하고, 발견된 취약요인에 대해 자본 확충 등 선제적 예방조치 시행(필요시 조치명령권 활용)</p> <p><b>⑤ 신평사 선정신청제 시행</b></p> <p>* 신용평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발행사가 희망할 경우 금감원이 발행사 대신 신평사를 선정</p> <p><b>⑥ '17년도 하반기 성장사다리펀드 조성 (3,600억원)</b></p> <p>* 스타트업(500억원), 기술금융(2,500억원), 세컨더리(600억원)</p> <p><b>⑦ 펀드패스포트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제출</b></p> <p>* 펀드패스포트(국경간 펀드판매 절차 간소화를 통한 시장개방) 시행을 위해 펀드등록·운용·감독 등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을 자본시장법에 반영</p> <p><b>⑧ 창업·벤처 PEF 운영 본격화</b></p> <p><b>⑨ 외국인 투자자의 상장채권 통합계좌(일괄주문) 제도 시행</b></p>